

2017

Report

of Trend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5. part2 제 74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 | | |
|--|----|
| 1. 자치 · 균형발전 ‘골고루 잘살게’ ...지방 재정자립 우선 돼야 | 3 |
| 2. 이낙연 인사청문회 " 법인세 인상 ,
마지막 수단...규제프리존 , 당과 대화해 볼 것 " | 4 |
| 3. 지방분권 실현...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 5 |
| 4. 지능형 정부 추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 6 |
| 5. 난개발 막고 안전한 ' 新규제프리존법 ' 나온다 | 7 |
| 6. 국정기획위 ' 지방공약 TF' 설치...균형발전 과제 논의 | 8 |
| 7.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 지방분권 · 균형발전으로 수도권 독점완화 힘쓸 것 " | 9 |
| 8. 김현미표 국토정책 3 대 키워드...균형발전 · 서민주거 · 교통인프라 | 10 |

II . 수도권 추진동향

- | | |
|--|----|
| 1. 김성원 의원 , 경기북도 설치로 국토 균형발전 이끈다 | 11 |
| 2. 경기도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해답” | 12 |
| 3. 균형발전 명분에... ' 규제 그물 ' 에 묶인 한국 수도권 | 13 |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 | | |
|--------------------------------|----|
| 1. 기대감 커지는 지방분권 정책... 선제적 대응해야 | 14 |
| 2. 지역균형은 빠진 지역발전특별회계 ? | 15 |

1. 자치 · 균형발전 ‘골고루 잘살게’ ...지방 재정자립 우선 되어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향신문

02

주요내용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날인 지난 11일 청와대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 과 ‘균형발전비서관’ 을 신설

- 자치분권비서관은 정무수석 아래, 균형발전비서관은 정책실장실 소속
- 청와대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서관 자리가 생긴 것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
 - 김수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 청와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과 ‘균형발전’ 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추진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 재정자립
 - 경향신문이 지난달 전국 3선의 기초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24명이 지방분권의 선결과제로 ‘열악한 재정’ 을 꼽았음
-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현재 8대 2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을 거쳐 6대 4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 고 약속
 -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을 도입
-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제 2 국무회의 신설
 - 그동안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회의는 간담회 수준
 - 지방정부의 재정 등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정책들도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
 - 제 2 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지지부진했던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전도 추진
 - 자치사무비율을 40% 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지방이양 일괄법’ 을 제정하고 개별 사무와 함께 예산과 조직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방안
 - ‘지방분권’ 을 헌법에 명시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
- ‘역대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분권 정책’ 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국의 혁신도시에 대기업 등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안도 추진
 -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신규 채용 때는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참여정부 시즌 2’ 라는 분석도 있음
 -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중요한 데도 새 정부 공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

시사점

새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 ·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화 정책 방안 제시를 지속적 요청

참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82226005&code=910100#csidx234a34215e1bc67ac418ef6c40efa4

2. 이낙연 인사청문회 " 법인세 인상 , 마지막 수단...규제프리존 , 당과 대화해 볼 것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2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Chosun Biz

02

주요내용

■ 현재 경제 상황 , 대량실업 대응 위한 하반기 추경 요건 충족 , 규제프리존법 처리 긍정적 ,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 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하반기 10 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현행 법률의 편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힘
-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해서는 당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함
 - 이 후보자는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마지막 방법이라며 ,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를 재검토하고 철폐하는 노력부터 하겠다고 말함
 -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
- 이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 실업’ 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규정
 -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10 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내달 편성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 81 조의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 등과 맞지 않다는 의견들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 우선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로드맵이 나올 것
 - 유관 부서가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며 조정하는 역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기업의 부담
 - 아직 연구가 되고 있고 지난 주말에 가동을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개별 공약의 실천 방안과 실천 계획을 다듬고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이행
- 세금 제도 개편
 -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며 거의 마지막 수단
 - 세율 인상 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거론
 - 좀 과도하게 ,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을 철폐해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
-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
 -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 개 시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 ’ 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함

시사점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논의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내용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참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4/2017052402607.html#csidxf33bd1df91e20284b0760cdbc49997

3. 지방분권 실현...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2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파이낸셜뉴스

02

주요내용

『지능형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지를 내세워 지능형 정부 10 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망

- '지능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국민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신정부를 지향하는 것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 행자부는 24 일 국정기획자문위에 첫 업무보고를 통해 지능형 정부 10 대 핵심사업을 보고
 -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등 4 대 목표를 추진
 - 행자부는 현재 여건상 추진 가능한 시범적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핵심과제를 발굴 . 추진한다는 구상
 - 행자부는 이런 핵심과제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2020 년까지 예산 55 억원을 투입해 지능형기술 · 정보통신기술 (ITC) 환경 기반의 행정프로세스 · 전자정부 서비스 및 인프라 재설계
- 우선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 모든 시민의 디지털 경험을 극대화해 특정 서비스 사용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대상 및 채널의 접근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모든 시민의 디지털 경험 극대화를 추구
 -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물론 개인비서와 같은 지능화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해 공무원의 개입 조정 없이도 숨은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현장행정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
- 가치공유정부
 -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공동으로 생산 · 공유 · 사용하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파트너십 구현을 추구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인프라와 데이터를 통해 국민주도의 정책결정 및 국민이 직접 완성하는 공공서비스 확대가 목표
- 안전정부
 -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감지 · 예방 체계 재정비 및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역량을 강화

『박범계 정치, 행정분과위원장은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해 행자부의 역할을 당부』

-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
-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전함
- 이에 따라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될 전망

시사점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만이 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지방재정 문제와 수도권 규제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제시가 필요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705241742381296>

4. 지능형 정부 추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2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정책뉴스

02

주요내용

| 지방분권 실현...지방 재정 자립 실현

-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
 -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 2 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을 제정
-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할 방침
 - 국세 -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을 확대
 - 이에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이양을 기조로 한 국세 · 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
 -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을 높임
-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 완화를 추진
 - '주민투표법' 을 개정해 주민투표 발의 주체 및 적용대상을 확대
 -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할 계획

| '국가균형발전 상징' 세종시, 실질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

- 새 정부는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
 - 지난 3 월 충청권 공약 :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
 - 이에 새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계획
- 혁신도시를 4 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아 균형발전을 이뤄낼 방침
 -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혁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
 -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도 추진
 - 지역 내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 사업 추진
 -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 상생형 기업생태계를 구축
 - 새 정부는 대기업 본사가 지방 이전할 경우 획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
-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먼저 현행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을 확대
 - 또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산 · 학 · 연 공동 R&D 및 사업화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지역산업을 육성
 -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사람 · R&D · 산학융합 중심의 혁신 산단으로 전환하고 산단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추진으로 산단의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

시사점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있어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측면에서 지역 산단의 우선 추진 필요

출처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34989>

5. 난개발 막고 안전한 '新규제프리존법' 나온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2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전자신문 etnews

02

주요내용

| 기존 법안 '과도한 철폐' 지양...與, 지역경제 활성화법 추진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신(新) 규제프리존법'을 내놓음
 -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뼈대는 유사하지만 과도한 규제 철폐를 지양하는 것이 차별점
 - 마구잡이개발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 규제에 초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활성화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 문재인표 규제프리존법
-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수정·보완한 지역경제활성화법(가칭) 입법을 추진
 - 더민주 정책위가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이자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이 주도
-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
 - 지역경제활성화법은 초안이 마련된 상황, 청와대 수석 등 인사가 마무리되면 청와대와 조율해 발의할 계획
-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
 -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은 과도한 규제 철폐를 담았기 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법에서는)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부분은 개선한다는 취지
 - 지금은 잠시 보류해 둔 상황, 법안 발의가 됐다면 규제프리존법과의 병합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성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
- 표
 - 규제프리존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핵심
 - 예컨대 대구시는 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웰니스에 한해 규제 특례가 파격으로 적용
 -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R&D) 과 투자를 하려면 대구가 최적의 장소가 되는 셈
- 더민주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로 지적된 마구잡이개발과 대기업 특혜 우려, 국민 생명·안전 위협 가능성은 최소화
 - 더민주는 “의료·환경·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면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
- 지역경제활성화법이 규제프리존법 '대체'가 아닌 '수정·보완' 성격이 짙은 만큼 입법 시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림
 -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

시사점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신규제프리존법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필요

출처

<http://www.etnews.com/20170526000277>

6. 국정기획위 '지방공약 TF' 설치...균형발전 과제 논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3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TF) 를 설치

-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30 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
- 지금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 를 구성
- TF 의 필요성 :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으며 이는 반드시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수밖에 없음
 - 재정 탓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발표되면 자칫 지역에서 서운해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
- 현재 지방공약이 140 개 정도 되며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 순위도 파악
-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굉장히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함
- 이를 위해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은 31 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 회와도 면담,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 이날 지방공약 TF 가 구성되면서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TF 는 국가비전 및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검토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TF 등 5 개로 늘어남

시사점

국정기획위 지방공약을 검토 과정에서 공약 우선순위 설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지속적 요구 필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0/0200000000AKR20170530072000001.HTML>

7.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 지방분권 · 균형발전으로 수도권 독점완화 힘쓸 것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3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경제

02

주요내용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출신 4선 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가장 강력히 추진할 책임자로 평가

- 김 후보자는 30 일 기자간담회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
 - 김 후보자는 당에서도 지역분권정당추진단장을 맡는 등 평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왔음
- 김 후보자 이력
 - 김 후보자는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합리적 온건 진보파로 분류
 - 지난 1977 년 유신 반대시위로 구속되고 1980 년 '서울의 봄' 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실형
 - 1988 년 한겨레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
 - 이후 1991 년 3 당 합당에 반대한 '꼬마 민주당' 에 입당
 - 이어 1995 년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에 참여
 - 1997 년 통추가 해체될 때 한나라당에 합류했는데 2000 년 경기도 군포에서 당선
 - 다시 2003 년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고 이후 17·18 대 의원에 잇달아 당선
-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는 균형발전으로 이뤄진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지방분권' 은 순수한 행자부 업무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는 과제
- 김 후보자는 '지방분권 우선 추진' 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해온 (행자부)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면서 "다만 국민의 명령은 수도권 독점을 나누라는 것이고 그 흐름에 맞춰 국민의 요구에 진지하게 답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
- 행자부의 한 관계자
 - 경험과 경륜이 많고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행자부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

시사점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0G4HSO8TW>

8. 김현미표 국토정책 3대 키워드...균형발전 · 서민주거 · 교통인프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3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헤럴드경제

02

주요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은 균형발전 · 서민주거 · 교통인프라 등 3 가지로 압축

- 김 후보자는 ‘국토의 균형발전’ 을 강조
 - 2011 년 해제된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낼 가능성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방의 지역균형발전이란 양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지양
 -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서울 인근에 쏠린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음
- 김 내정자는 30 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면서 국토부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의 LTV · DTI 기준은 9 월부터 한층 강화될 전망
- 서민주거, 복지와 일자리 한번에
 - 김 후보자는 과거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었음
 - 청년과 신혼부부에 특화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주거복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임
 - 직접 집필한 책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 에서 김 내정자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자부심을 피력
-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 확충을 전제로 할 전망
- 그는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
 -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장기적으로 취약했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이 직접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지난해 8 월 민홍철 의원과 3 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 의 발의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
 - 일각에선 시장에서 반대 관점을 보이는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옴
- ‘통근 피로’ 확 줄인다 =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이 유력
 - 시간적 거리를 단축해 직장인들의 피로도를 줄이려는 목적
 - 서울이 직장이 있는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마련에 힘쓸 것
 - ‘국토’ 에 비해 ‘교통’ 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명박 · 박근혜 정부와 달리 김 후보자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기자극 효과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옴

시사점

서울의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 요소등을 제거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 요구 필요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31000138&ACE_SEARCH=1

1. 김성원 의원, 경기북도 설치로 국토 균형발전 이끈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동두천 · 연천) 은 국토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 일 밝혔다

-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제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분야에서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
- 이에 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권 ·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 제정안의 주요내용
 - 경기도 북부의 10 개 시 · 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
 - 경기남 · 북도지사, 경기남 · 북도 교육감, 경기남 · 북도의회의원 분립
 - 경기도 재산의 승계 방법
- 경기도 분도 (分道) 논의는 1992 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
-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경기도가 분도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6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되어온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역차별
- 이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과 행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을 치유해야 할 때

시사점

경기북도 설치가 기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4159>

2. 경기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해답”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2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 1 뉴스

02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주요과제인 일자리창출(81만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육성에 나설 계획
 -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 해소, 퇴직자와 실직자, 재직자까지 포함한 직업전환교육, 평생교육의 제2의무교육화, 제조업과 IT 인력을 결합한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을 추진할 예정
-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규제 때문에 신산업 성장이 방해받는 일 없도록 규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
- 도는 이에 대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토지이용합리화 등을 통해 규제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난개발 방지 및 집단화 등)와 친환경 수출형 강소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제시
 - 이를 통해 81개사에서 2조 164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5138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의 경우, 산업단지 부지면적을 현행 6만㎡에서 30만~50만㎡로, 건축면적을 1000㎡에서 제한폐지로 각각 완화하면 38개사(총투자액 7963억원)의 투자가 가능해 18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
 - 다만 계획입지 확대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간 협력을 통해 비도시지역 개별입지공장의 난개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
- 또 1984년 7월 11일 이전에 들어선 공장의 증설규제를 완화(부지추가 6만㎡, 기존건축면적 100~200%)하면 32개사에서 1조 1957억원을 투자할 수 있어 1782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친환경 수출형 강소 중소기업 규제해소를 통해서도 11개사에서 1720억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어 1477명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도는 폐수 등 오염증가 없는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용도지역 변경, 첨단업종 개편, 농업진흥지역 공장특례 적용 등을 통해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힘
 - 도내에서는 앞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평택 우리산업(2017년 3월 용도지역 변경)이 투자(1524억원, 신규 고용 1229명)할 수 있게 됐음
 - 또 평택 엠아이텍과 하남 만전식품도 각각 기업규제완화법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조치를 통해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늘어나는 고용창출은 각각 50명, 80명
- 도는 앞으로 정부 일자리정책에 보조를 맞춰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4차산업 관련 규제과제 발굴·해결을 위해 경기연구원에 단기정책과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규제정책방향)를 의뢰하고, 6~7월 중 신기술기업 설문조사도 실시

시사점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인구 등 기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이 지방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2003828>

3. 균형발전 명분에...! 규제 그물 '에 묶인 한국 수도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3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국경제

02

주요내용

부활하는 '메이드 인 재팬', 1982년 수도권계획법 제정... 각종 권역 규제만 10개

- 일본이 수도 도쿄에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 수도권은 수십 년째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음
- 수도권은 국내 등록 공장의 절반 정도가 몰려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공장 신설과 투자 등에서 강한 규제
- 한국의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
- 이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 행정 조치가 속속 추가되면서 수도권은 그야말로 겹겹이 쌓인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 됨
 -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10개의 복잡한 규제
 -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되고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음
 - 수도권 전체에 걸쳐 4년제 대학도 신설할 수 없고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도 금지
- 해외로 진출했다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도 홀대를 받음
 - 2013년 8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기업지원법)이 제정돼 유턴기업은 조세 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탓
-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수도권 기업의 투자 포기나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수도권 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이에 따르면 수도권 62개 기업은 2009~2014년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 시기를 놓쳐 3조 3329억원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
 - 이 과정에서 1만 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도 사라짐
-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이 거의 없음
 - 오히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지원 같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시사점

수도권은 비수도권 비교해 대부분의 산업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이 아닌 국가전체의 산업 공간구조 개편 안에서 국가균형발전 추진 필요

출처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2963501>

1. 기대감 커지는 지방분권 정책... 선제적 대응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1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청투데이

02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의 법적 기반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
- 또 개헌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방분권 · 균형발전 정착 내용을 포함시킬 것
- 19 대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구축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확인
 -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정무수석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 정책실장 산하에는 균형발전비서관을 각각 신설
 - 이명박 정부 이래 퇴보했던 지역정책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 쪽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
 - 관련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될 것으로 보임
- 지방분권 성향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주목할 대목
-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내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제2국무회 신설'을 수용한 것도 특기할만 함
 - 안 지사는 당시 이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 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유기적인 채널을 구축, 이를 정례화해서 지역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지방분권에 대한 열린 의지를 읽을 수 있음
- 각 지역은 물론 시도협의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함을 일깨움
 -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그간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자성론이 전제
 -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 어제 공포한 서울시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의 핵심 사안인 재정자립도 과제
 -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6 대 4 까지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세부헌안을 풀어야 함
-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 주요과제로 선정하는 일이 긴급
 - 엇그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큼
 -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특히 주시하는 이유다. 난관도 예상
 - 입법 조치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내년 개헌 일정에 맞춰 지방분권 국가임을 새헌법에 명문화하는 데도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시사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라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속에서 재정자립도 등 주요 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등 기반 구축 필요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1438>

2. 지역균형은 빠진 지역발전특별회계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5.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향신문

02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 예산이란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군 단위보다 시 단위 배분 늘어나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는 예산 : 연간 10 조원이 넘는 규모의 지역발전특별회
- 그러나 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내역과 각 지역별 보조금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모습이 나타남
 -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증가폭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가 하면, 예산 배분이 영남지역에 편중
 - 또한 당초 회계를 편성할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군 단위 지자체보다 시 단위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도 분석
 -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인 것
- 지특회계에서 지역마다 배분할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 얼마씩 배분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음
 - 회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고 못박아뒀기 때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도 기재부는 응하지 않음
 - 때문에 지역에 따라 얼마만큼 배분했는지, 특정 지역이 최근에 얼마나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갔는지 알아 보려면 복잡한 방법을 거쳐 정보를 취합해야 함
- 현재로서는 충남연구원이 펴낸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 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가 각 지자체가 공개한 정보 등을 취합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특회계 지역별 배분내역을 분석한 유일한 자료

보고서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 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난해 기준 지특회계 예산을 가장 많이 가져간 광역지자체는 경북 1 조 7688 억원이 배분
 - 전남 (1 조 6093 억원), 경남 (1 조 1692 억원), 경기 (1 조 820 억원), 전북 (9318 억원) 영남지역에 배분된 비중이 크지만 호남에 배분된 액수도 적지 않아 특정 지역에 몰아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
 - 그러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시점인 2008년부터 9년간 각 시·도의 배분액 증감폭을 비교하면 영남지역 편중이 두드러짐
 - 9년간의 전체 회계는 21.0% 증가했지만 경북 (56.7%), 대구 (30.3%), 부산 (27.3%) 은 평균 증가율을 넘어 배분 비중이 점차 늘어났음
- 특히 최근 9년간의 시·도별 지특회계 배분액 증감추이
 - 당초 낙후되고 산업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낀 지자체에 배분되는 비율이 높았음
 -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서울의 배분액이 가장 낮고, 도 단위 지자체보다 광역시의 배분액이 크게 낮은 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
- 최근 9년간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뒤바뀌고 있음
 - 최근 9년간 배분액 증가폭이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서울 (131.8%), 경기 (69.6%), 경북 (56.7%), 인천 (55.2%) 순
 - 서울은 지난해 배분액이 915 억원으로 배분된 액수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배분된 예산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은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지점
 - 반면 광주 (-13.2%), 제주 (-8.4%), 전남 (-0.4%) 3 개 지자체는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중에도 오히려 배

2. 지역균형은 빠진 지역발전특별회계 ?

02

주요내용

분액이 감소

-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로는 강원과 제주, 충청권 지자체가, 증감폭으로 보면 호남권 지자체가 지역균형 발전을 표방하는 예산 집행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모습
- 또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보면 당초 상대적으로 인구규모나 재정자립도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군 지역에 예산 배분 비중이 높던 양상이 시간이 갈수록 시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 지원으로 바뀌는 추세

• 연구를 진행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이는 처음의 국가균형발전회계에서 추구하던 국가균형발전에서 점차 중앙정부가 편성한 특정 신규사업을 군보다는 시에 더 많이 몰아주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었음을 시사
- 지특회계 배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위주로 고려되기보다는 그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

• 시 단위 45% 증가, 군 단위는 18% 늘어

- 이와 같은 배경에는 기재부가 사실상 지특회계의 배분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탓에 기재부의 결정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
- 지특회계는 세종특별자치시 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제외하면 생활기반 계정과 경제발전 계정으로 크게 나뉨
- 두 계정 모두 기재부와 각 해당 부처의 결정에 따라 예산 배분이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음
-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군특회계에 대한 편성권을 갖고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지역발전위는 실질적인 권한이나 조정 기능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

• 대규모 토목사업이 가장 큰 비중도 문제

- 여기에 건설과 토목 등으로 대표되는 도로 건설, 하천 정비 등의 사업이 여전히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특회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 올해 예산 기준 단위사업 예산이 1000 억원이 넘는 것은 총 29 개로,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합이 7 조 5000 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을 차지하는 셈
-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광역철도 건설 지원사업,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2000 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이 지특회계 사업목록의 금액별 상위를 차지
- 특히 토건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규모 외에도 수도권 집중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한다.
- 지난 3년간 신규 지특회계 사업이 귀속된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가 300 억원이 넘는 지특회계 금액을 배분받아 최고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260 억원을 받아 두 번째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집행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음

- 지특회계는 어느 예산보다도 토건사업으로 치적을 내려는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의 로비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계정
- 정권에 따라 쪽지예산이 집중되는 도로 건설 같은 분야는 지특회계와 완전히 무관할 수 없음
- 기재부나 국토부 등의 부처에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그 결정이 자의적이라도 비판하기 어려운 구조 불투명한 예산 분배는 권력구도에 영향을 받는 정치예산의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까지 있음

시사점

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조정기능의 회복, 수요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토목사업 등에 대한 조정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참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71339001&code=940100#csidx06e12d50d403bb4a2f41b7ff3bd2776